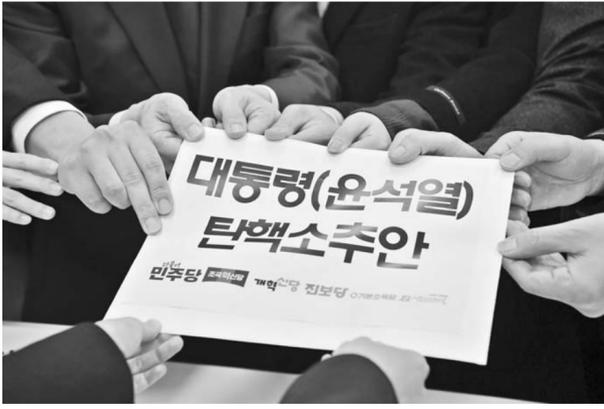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사태에 정국 '대혼돈'

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총공세... "내란죄 단죄" 여, 대통령 탈당 등 대응 부심... 친한·친윤 '내홍'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가 연말 정국을 거세게 강타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급작스럽게 선포한 뒤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지만, 날이 밝으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즉각 대통령 퇴진 공세에 돌입했고, 여당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위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 기류도 포착되면서 내용의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이를 형성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조치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한계와 친윤계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계파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 절차에 돌입하면 여권의 계파 분열상은 한층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친한계 일각에선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럽게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지만, 친윤계에선 강하게 선을 그었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법안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이 선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여권의 분열이 분당 수준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민주화 이후 초유 사태... 국회가 제동

국회, 비상계엄 선포 3시간 뒤 본회의 열고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무효'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다.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은 총 16번 선포됐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 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직후 발령됐다. 이후 1980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해 1981년까지 유지했다. 민주화 과정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4일 새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 의사만으로 계엄을 즉각 선포할 수 없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재적 국회의원과 과반 찬성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국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에서 국가 수장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 선포 뒤 온 국민은 밤잠을 설치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은 계엄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 안팎에는 군인과 경찰이 대거 진입하면서 긴장감이 극대화됐다. 군용헬기가 국회 상공을 수차례 비행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하지만 계엄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국회는 3시간 여 뒤인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

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며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4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날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계엄령이 근거해서 군경이 공공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뒤 3시간 여가 지난 오전 4시20분쯤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초유의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일단락됐다. 국회·부미헌기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공고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종합 지원기관으로 전문적인 역량과 시간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 공모직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비상임이사
- 선임인원: 2명
- 임기 및 보수
 - 임 기: 임용일로부터 3년 * 친중립 정관에 의거하여 연임 가능
 - 보 수: 무보수(실비지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회칙 참조)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친중립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친중립 소정양식, 필수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친중립 소정양식, 5매 이내)
 - 학위논문(석사, 박사) 요약서 각 1부 (친중립 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경력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친중립 소정양식)
 - 임용결정서류 부존재 서약서 1부 (친중립 소정양식)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주주 증명서류 원본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조회 시 허위 또는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임용취소함

※ 서명은 자필서명으로 작성요함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12. 2.(월) ~ 12. 16.(화) (15일간)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1. 방문접수의 경우에는 휴일접수 불가
 - ※-2.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제혁신본부 기획감사팀(☎ 064-751-3309) (63217 제주시 연상로 473, 4층 기획감사팀)
- 원서교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jba.or.kr)에서 다운로드
-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 전형: 2024. 12. 24.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12. 26. ~ 2025. 1. 10. 예정
 - ※ 상기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통보 진행
-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제혁신본부 기획감사팀(☎064-751-3309)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통합 모집 안내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참여가능)
- 지역연금수급자 (배우자 포함)
- 지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는 참여 가능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6급, 인지지원 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추진 중인 일자리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재(중)복합성 불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신청방법

오프라인: 지역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각 수행기관 직접 방문
온라인: 노인일자리(www.senior.or.kr) 신청
※ 단, 온라인 참여희망자는 기관방문 후 참여신청서 추가 작성, 자격계 확인 후 선발 진행

신청기간

2024년 12월 9일(월)~12월 27일(금)까지 09:00~18:00, 공휴일 제외
※ 읍면동 파견 접수: 2024년 12월 9일(월)~12월 11일(수) 08:00~16:00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참여대상

개별신청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 작성 및 고득점자 순으로 통합 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탈락될 수 있음)

상장금의

서귀포시청 064)760-2385 / 대안노인회 서귀포시지회 064)733-1821-2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64)762-0991, 0211

신청기간 및 사업내용

(노인공익활동: 일 3시간, 월30시간 / 노인영양활동: 일 3시간, 월60시간)

구분	수행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모집인원
노인공익활동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노노케어	- 취약가구 1:1 방문하여 안부, 말벗, 정서지원 등	300명
	경로당	경로당 및 분회 실내 청소활동 - 건강강의, 고장유무 확인 및 관리 - 냉난방기 고장유무 확인 및 관리 - 가스 확인 및 주방시설 관리 등 - 기타	900명	
노인영양활동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스마트한 어르신 디지털 나눔 사업	- 디지털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참여자 100명을 서귀포시 관내 경로당(수요)에 배치하여 디지털 문해 향상과 출생애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스마트건강당(의료, 스마트TV 등), 일반경로당 디지털기기 운영 지원 - 스마트폰 사용법 등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디지털 사회의 문맹 해소(문자 송수신, 영상통화, 사진 찍기, 카카오톡, 앱 설치, 기호스프 사용법 및 민원발급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안내 등)	100명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hn Joock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한국요양원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대상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한국요양원 종사자 일동

T.064-727-7633

제주시 은남2길 39 (연동)